

인조 후반~효종 초반 대외전략상의 위기에 대한 검토

김태훈*

〈차 례〉

1. 머리말
2. 효종대 초반 대청외교에서 備倭論의 한계 노정
3. 대일외교에서 朝·淸和親論의 전개와 종말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병자호란 이후 새로운 대외 전략이 모색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외교적 논리·명분이었던 備倭論과 朝·淸和親論이, 청의 입관 및 효종의 즉위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계기로 그 효용성을 잃고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는 과정을 인조 후반~효종 초반의 대외전략상 위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이다.

인조대 후반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해 전개된 비왜론은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고, 청·일 간 연계를 차단하면서 대일정책상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청의 입관 이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된 상황, 효종 즉위 이후 반청적 인사의 기용에 대한 청의 견제 등과 맞물리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조·청화친론은 병자호란에서 패전하여 청에 稱臣하게 된 사실을 일본 측에 은폐하는 전략이었다. 그 한계가 매우 분명하고 불완전한 대응책이었던 조·청화친론은 청의 입관 이후 조선에 대한 견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시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이러한 외교 전략의 옹도 폐기는, 이후 새로운 대응 전략이 출현하지 않음으로써 대외전략상 위기 국면으로 이어졌다.

[주제어] 병자호란, 備倭論, 朝·淸和親論, 淸의 入關, 역학구도 변화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1. 머리말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명·청교체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병자호란은 최소한 우리 역사에서만큼은 관련된 어떤 사건보다 더 크게 인식되는 사건이다. 병자호란은 돌연 사대의 대상을 청으로 바꾸고, 2세기 넘게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해오던 명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충격과였다. 조선은 일변한 동북아시아 역학구도 하에서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다시 상정하고 새로운 대외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급변한 것은 대명, 대청 관계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측이 조선의 약세를 틈타 집요하게 외교적 공세를 가해옴으로써 고조되었던 대일위기감 또한 만만찮은 난제였다. 북방 여진에 대한 守禦와 남쪽 일본에 대한 接待는 조선전기 이래 ‘北虜南倭’에 대한 전통적 대응 전략이었는데, 군사적으로 맞설 수 없게 된 여진(청)의 존재와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군사적 도발마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동향은 사실상 그러한 전략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병자호란의 충격은 조선의 대외관계나 대외 전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명·청·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위상이 재조정되고 국가 간의 상호관계마저 크게 흐트러졌다. 따라서 대외 전략 모색이라는 막중한 과제는 조선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었다. 병자호란 직전에 제국을 선포한 여진인로서는, 명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조선·명·일본의 동향, 그리고 그 타자들 간의 관계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청의 공세와 내분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던 명이나,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립되다시피 했던 일본 역시 직면하고 있던 대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에 부심하였다.

요컨대, 병자호란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모든 주체들이 종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 후반기의 대외 전략은 것처럼 변동성,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모색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색의 과정은

혼선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외교 전략이나 외교적 논리·명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일본의 연계를 저지하는 한편, 청에는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일본에는 “청이 우리를 침범했으나, 곧 화친을 맺고 물러갔다”라는 식으로 전쟁의 실상을 왜곡하고 중국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전자를 ‘備倭論’, 후자는 ‘朝·清和親論’으로 지칭할 수 있다.

한편, 1644년 청의 입관은 명·청교체의 과정을 일단락 짓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도를 확정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의 위상이 재조정되는가 하면, 병자호란 이후의 전략이 수정·폐기되는 등, 전환점으로서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비왜론, 조·청화친론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외교 논리·명분의 효용성이 소멸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병자호란 이후 청의 입관을 전후한 시기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관해 다자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검토한 동태적 연구로는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 조선의 대일 전략과 인식을 구명한 연구,¹⁾ 조선을 매개로 전개된 청과 일본 간의 소통과 관계 재편을 재구성한 연구,²⁾ 대청 왜정 보고인 倭情咨文을 소재로 하여 인조대 후반 대청·대일 전략의 일면을 조명한 연구,³⁾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된 조선·명 간의 비밀 접촉의 전개 양상과 접촉 의도를 구명한 연구⁴⁾ 등이 참고가 된다. 특히 청·일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 병자호란과 청의 입관을 전환점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체계적 인식에 도움을 준다.⁵⁾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 인조 후반기 전개된 대외 전략

1) 한명기, 『丙子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認識』,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에 재수록).

2) 홍성구, 『淸朝의 日本認識』, 『역사교육논집』 42, 2009; 홍성구, 『淸入關前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再編과 日本』, 『명청사연구』 33, 2010.

3) 김태훈,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4)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5) 각주 2)의 논문들.

의 모색과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북로남왜에 대한 외교적 논리·명분이 효용성을 상실하면서 초래되는 외교 전략상 위기 국면에 관해서인데, 이는 필자가 제출한 왜정자문에 관한 논문의⁶⁾ 후속 연구이기도 하다. 왜정자문에 관한 연구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대일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한 ‘備倭論’의 전개가 조선·청 간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청·일 간 연계 저지, 대일정책상 독립성 확보, 국방력 재건에 대한 청의 감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구명하였다. 그런데 청의 입관이라는 외부 요인, 인조에서 효종으로 정권 교체라는 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용도 폐기되는, 그 이후의 추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청 외교 논리로서 비왜론에 주목한 반면, 대일외교상 활용되었던 외교 논리·명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새로운 대외 전략이 모색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비왜론과 조·청화친론의 논리·명분이 창출되어 대응책으로 활용되다가, 청의 입관 및 효종의 즉위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계기로 그 효용성을 잃고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는 과정을 인조 후반~효종 초반의 대외전략상 위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효종대 초반 대청외교에서 備倭論의 한계 노정⁷⁾

임진왜란 종전 후 3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되면서 대일경계심은 상당히 완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런데 1635년 대마도내의 권력 투쟁인 柳川一件과 1636년 병자호란 발발과 패전은 대일위기의식을 전쟁의 공포를 되살릴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시켰다. 임진왜란 이후 점차 약화되어 가던 ‘倭賊’ 일본의 존재가 부활한 것이다. 이 시기 ‘우려스러운 倭情’으로 다가왔던 일본

6) 김태훈, 앞의 논문.

7) 효종 즉위 이전, 인조대 후반의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한 비왜론의 전개 과정과 그 성과에 관해서는 김태훈, 앞의 논문, 179~193쪽의 내용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청의 입관 및 인조에서 효종으로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그 효용성이 소멸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다.

의 국내 동향과 대마도 측의 외교적 공세는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와 맞물리면서 대일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이로 인해 ‘접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던 일본을 ‘수어’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일변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속에서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다시 상정하고 대일정책 역시 원점에서 재구상해야 하는 과제가 조선 조정에게 부과되었다.

북로남왜의 구도하에서 존립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논의를 촉발한 것은 1637년 12월에 전해진 소위 7조목 책契였는데, 거기에는 대대적인 외교의례 개정 요구와 조·청관계, 대륙정세를 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⁸⁾ 7조목 서계 중 “교역하는 物貨가 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런가, 북쪽 오랑캐의 난리로 인해서 그런가”라는 항목은 일본을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역학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국왕 인조와 신료들은 각각 완전히 상반된 인식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인조는 일본이 조선을 침범할 경우 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임진왜란 때에 명이 원병을 파견하였던 것처럼 청 역시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청을 적대시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청이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판단하였던 인조로서는 당연한 구상이었다. 대마도의 책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도 일시적인 회유가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때문이었다. 반면 조정의 대세는 대마도를 주선자로 이용하여 일본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청의 움직임에 경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趙綱과 같은 이는 심지어 일본에 청병하여 청에 복수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로남왜에 대한 대응 전략은 공통적으로 ‘以夷制夷’의 틀을 차용하였는데 인조의 구상이 ‘以淸制倭論’이었다면 신료들은 ‘以倭

8) 『仁祖實錄』 권36, 16년 1월 26일(경인).

制淸論'으로 그에 맞서는 모습이었다. 병자호란 직후 7조목 서계 건으로 인해 촉발된 君臣 간 논쟁은 각자의 구상이 노출되고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일정책 논의가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인조대 대일정책의 외형적인 틀은 대체로 인조의 구상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7조목 건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던 인조는 관련 倭情을 청에 移咨하면서 倭情 可慮·可疑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한 '備倭論'의 전개이다. 비왜론은 인조의 기본 구상 즉, 以淸制倭의 역학관계 상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조의 의사가 반영된 대일·대청 전략이었다. 비왜론은 일본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청의 입장과,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일본의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조선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인조대 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조의 親淸 행보는 청이 비왜론에 제동을 걸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비왜론은 외교상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제약을 받고 있던 군비확충에 대한 1645년 청의 묵인·승인 조치가 그것이다. 병자호란 직후 인조에 의해 전개된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한 비왜론은 청의 왜정탐지 욕구와 부합하면서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군사적 대응책과 함께 대일정책의 양 축이 되었다.

이상에서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 역학구도를 상정하고, 可慮·可疑한 倭情에 부합하는 대일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재건과 함께 추진된 것이 대청 왜정 보고 형태로 전개된 비왜론이며, 그것을 통해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청에 대한 왜정 보고는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인조대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효종대 대청 왜정 보고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649년(효종 즉위) 11월이었는데, 그 발단은 인조의 승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9년 1월 大臣들이 城池·軍備 수선과 安州에 주둔하고 있는 평안병사가 영변에 鎭守하는 것에 대해, 당시 조선에 입국해 있던 청의 칙사에게 청 조정의 승인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과 달리 왜정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칙사는 자신들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⁹⁾ 칙사들이 귀국하게 되면 무기한 유보 되거나 백지화될 뻔한 군비확충 승인 건은, 1649년 2월에 대마도에서 差倭 藤智繩이 나오면서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藤智繩의 입국 소식이 조정에 전해진 시점은 칙사 일행이 아직 서울에 체류 중일 때였다.¹⁰⁾ 비변사에서 藤智繩이 조선에 온 사실을 칙사가 이미 듣고서 떠났기 때문에 사은사가 가면 청에서 연유를 탐문할 것이 분명하므로 狀啓의 요지를 등사하여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사은사 일행에게 과발을 띄워 전달할 것을 계청하였고,¹¹⁾ 사은사 정태화는 북경에 도착하여 중도에 전달받은 왜정을 보고하는 동시에 군비확충 건에 대해서도 청 兵部에 승인을 요청하였다.¹²⁾ 왜정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일전에 칙사에게 승인을 주선해줄기를 부탁했던 군비확충 건에 대해 북경에 직접 승인을 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청에서는 군비확충 금지는 선황제의 유사이므로 사신의 구두 요청이 아닌 奏文을 통한 정식 승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³⁾ 정태화 일행은 군비확충에 대한 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1649년 6월에 압록강을 건너 돌아왔는데,¹⁴⁾ 그간 조선에서는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는 변화가 있었다. ‘倭情 可慮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확충’ 승인 요청은 자연스럽게 효종대로 이월되었다.

군비확충 승인 요청이 다시 진행된 것은 1649년 10월, 칙사가 조선에 입국하여 객관에 유숙하던 시점이었다. 비변사에서는 관련 奏文을 사신 행차에 부쳐 보내는 것보다는 칙사가 攝政王과 친밀하므로 그들이 청에 돌아가서 승인을 주선하는 편이 적절하니, 대신들이 객관에 가서 부탁하도록 할 것을

9)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1월 23일.

10)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 기축(1649년) 2월; 『인조실록』 권50, 27년 2월 25일(갑인), 3월 26일(을유).

11)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3월 23일. “備邊司啓曰 藤倭來到之事 勅行既已聞知而去 謝恩使行之入也 必有探問之事 使行去時 欲得其狀啓中要語騰出者 以爲答問之地 前日東萊府使狀啓中辭語 拈出別紙 書啓矣 以此撥傳于謝恩使行到處 何如. 答曰 依啓”

12) 『白軒先生集』附錄 卷2, 『年譜(中)』, “東萊府使盧協 慶尙監司李曼狀啓 有倭情巨測之語 右相使燕時 請修繕城池甲兵”

13) 『孝宗實錄』 권5, 1년 11월 2일(임자).

14)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6월 25일.

계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근래 지속적으로 耶蘇宗門禁制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표류 漢人을 북경으로 직송하므로 대개 그 속에 섞여 있는 크리스티교인들을 일본에 압송할 수 없고, 특히 漢人 商船의 물자까지 북경으로 보내므로 일본으로서는 통상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유감을 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방비해야 한다는 것을 군비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들 것을 건의하였다.¹⁵⁾ 효종은 일단 館伴으로 하여금 칙사들에게 언급하여 반응을 살피라고 지시하였는데, 칙사들은 “兵部에서도 결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촉하느냐”며 불가하다는 반응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후 조정 대신들과의 면담에서 “표류 한인의 말이 7월에 포착되었다고 하는데¹⁶⁾ 어찌 알리지 않고 우리들이 와서야 말하는가, 일본에 보내려고 지연시키다가 우리들이 온다고 하니 별수없이 말한 듯하다”고 캐물으며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¹⁷⁾ 군비확충 건에 대해서도 “만약 변란이 있으면 청에서 구원하러 올 것이다. 상국에 보고하면 구원할 것인데 왜인이 어찌 그 사이에 날아오겠는가”라고 하면서 승인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¹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칙사들이 객관에서 漢船의 물자를 처분하여 興利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결국 “일단 移咨하면 우리가 형편을 살펴 조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여 아뢰겠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칙사들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¹⁹⁾

15) 『備邊司謄錄』, 효종 즉위년 10월 8일. “近日所請者 亦在於耶蘇宗門捉送之門 其所謂耶蘇宗文 乃雜於漢人商船中也 而漂漢人 前已解送于北京 今又捕得許多漂漢 並與其所持物貨 而直送于北京 其通商之利 亦絕矣 咫尺倭館 彼無不知之理 其所蓄憾於我 必倍於前日 在我不可全無預防之事 今將此等事情 陳奏大國”

16) 일본에 왕래하며 무역하는 漢人 商船이 통영 앞바다를 지나다가 조선 수군에 나포된 사건이다. (『효종실록』 권1, 즉위년 7월 16일(계유)) 이후 한인들은 칙사들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되고 신고 있던 물자는 칙사 일행이 압수하여 객관에 머무르며 판매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추정되는 다음 기사이다. 『동래부집에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기축(1649년) 7월. “蔚山漂到船 唐人六名 入送日本”

17) 『비변사등록』, 효종 즉위년 10월 11일. “且曰 聞漂漢之言 七月見捉云 而何以不即報知 俺等之來始言之也 … 鄭曰 此必通商於本國 或欲送于日本 故爲遲延 聞俺等來 而始告之也”

18) 『비변사등록』, 효종 즉위년 10월 11일. “諸勅 相顧而嘆曰 倭何足憂 如或有變 我國 卽救之 … 鄭曰 倭若不好意思 卽報上國 則可卽救之 倭豈能飛乎”

19) 『비변사등록』, 효종 즉위년 10월 12일. “則答曰 此事 不可徒憑口舌 若有移咨之舉 則俺當觀勢 直陳本國事情云”

이렇게 해서 조정에서는 1649년 11월 사은사 仁興君 李瑛을 통해 군비확충 건을 청에 상주하였는데, 해당 주문은

- ①도입부 : 최근 일본이 도발한 사건에 대한 동래부사 노협과 경상감사 이만의 倭情 보고
- ②본 문 : 무인년(1638) 이래 현재까지의 우려스러운 倭情과, 왜란 이후 군사력을 붕괴되어 청의 구원만 믿고 있는 조선의 상황이
- ③결 론 : 警急한 일이 일어나면 구원병이 올 때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城池修築·軍兵訓練을 허락하여 자강의 방도로 삼게 해달라는 요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²⁰⁾ 이때의 奏文은, 인조대의 倭情咨文이 倭情 可慮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 보고였던 반면, 군비확충에 대한 淸帝의 승인을 요청하는 ‘奏文’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사안 자체가 선왕대에서 이월된 것일뿐더러 내용과 발송 의도 등에서 인조대 후반 왜정 보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인조대 대청 왜정 보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조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효종의 첫 왜정 보고에 대한 청의 반응은 이전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으며, 친청과 숙청과 산림의 기용 등 효종대 초반 정국 변화와 연동되면서 청의 대대적인 내정간섭으로 이어지게 된다.

1650년 2월 8일 평안감사와 의주부윤은 청의 군사가 關外에 주둔하고 칙사 6명이 연달아 나왔다고 보고하였다.²¹⁾ 칙사들은 귀환 중이던 사은사 인흥군 이영 일행을 억류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장차 대군이 닥쳐오면 머리를 깎는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와언이 퍼질 정도로 조야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다.²²⁾

20) 『同文彙考』 原編 卷78, 『倭情』, 『陳請築城備倭奏』; 『효종실록』 권3, 1년 3월 8일(신유).

21) 『燃藜室記述』 권30, 『孝宗朝故事本末』, 『淸使查問』.

22) 『연려실기술』 권30, 『효종조고사본말』, 『淸使查問』, “及客聲至 又不知按查之爲何事 人情震懼 或云大兵將至 不免被髮之辱”

조정에서는 사은사가 보낸 밀계를 통해서 칙사들의 파견 목적이 査問임을 알 수 있었다. 밀계의 내용은 칙사들이 前年の 奏文(陳請築城備倭奏) 가운데 “표류 한인을 청으로 압송한 것이 왜인들이 혼란을 야기할 단서가 되었다”는 부분과 備倭의 논리를 내세워서 군비확충을 하려는 의도 등을 힐문하고, 김자점 일파의 숙청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리고 인조의 喪에 칙사를 보내 弔祭 하였는데도 그에 대해 사은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²³⁾

당시 청에서는 효종 즉위 이후 척화파의 영수 김상헌과 그의 지원을 받는 반청 성향의 산림이 조정에 대거 진출한 반면 친청파인 김자점 세력이 퇴조된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조선 정계의 동향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에서 査問使를 파견하였던 것이다.²⁴⁾ 사문사 파견을 통한 청의 내정간섭의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조선 정계의 반청적 기류에 대한 견제였지만, 이때 청이 명분상 사문의 대상으로서 표면에 내세운 것은 전년에 사은사 일행 편에 전한 陳請築城備倭奏였다.²⁵⁾

밀계를 받아본 조정에서는 査問이 신료들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奏文 건과 관련해서는 그 속에 인용된 당시 각각 경상감사·동래부사였던 이만·노협으로 하여금 신문에 대비토록 조치하였다.²⁶⁾

3월 6일에 칙사 일행이 서울로 들어왔고, 효종은 이튿날 그들을 접견하고 淸帝의 칙서와 섭정왕 도르곤의 칙서를 전달 받았다.²⁷⁾ 청제의 칙서는 陳請築城備倭奏에 대해 질책하는 것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奏文에 표류 한인을 왜관으로 보내지 않고 상국으로 보냈으므로 왜인들이 악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한인을 왜인으로 만들어 倭國으로 보내겠다는 것인가? 그런 보고를 한 관원을 처벌하지 않고 그 글을 인용하여 주문한 것은

23) 『효종실록』 권3, 1년 3월 1일(갑인).

24) 김세봉, 「孝宗初 金自點 獄事에 대한 一研究」, 『사학지』 34, 2001.

25) 본고에서는 당시 청의 査問과 관련하여서는 논지상 奏文 건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26) 『효종실록』 권3, 1년 3월 3일(병진); 『비변사등록』, 효종 1년 3월 6일.

27) 『연려실기술』 권30, 『효종조고사본말』, ‘淸使査問’; 『효종실록』 권3, 1년 3월 7일(경신). 이때 섭정왕의 칙서는 왕실 간 통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조선 국왕의 과실이다. 즉시 나국하여 중죄를 내리라. 왜인이 침범하면 대국의 군사가 구원할 것이며,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천하가 평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조선의 병마를 조발할까 염려하여 허위로 왜정을 핑계댄 것이다. 한선을 왜관으로 보내려고 한 것과 군비확충을 도모한 것은 모두 亂臣에게서 나온 말이다. 先王(인조)은 청에 충성을 다하였고 이 점은 現王도 마찬가지인데, 간신들이 結黨하여 끝없는 亂의 근원을 열어놓은 것이다.²⁸⁾

로 요약할 수 있다. 1645년(인조 22) 조정에서 耶蘇宗門禁制를 移咨하였을 때 “倭情이 우려스러우니 변방의 방비를 엄중하게 신칙하여 싸워서 지키는데 만반의 준비를 잊지 말라”는 皇命을 내렸던 것과는²⁹⁾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칙서가 전달 된 바로 다음날, 3월 8일에는 조정 신료들에 대한 칙사들의 대대적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大臣·六卿·兩司 관원·承旨 등을 南別宮에 불러모아 신문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奏文(陳請築城備倭奏)은 누가 주관하였는가? 성지수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 ②新人을 등용하였다고 하나 막상 舊臣(척화론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弔祭에 대해서 사례하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해당 표문은 누가 지었으며 당시 예조판서는 누구인가?³⁰⁾

삼엄한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신문은 조정 내외에 상당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조정 신료들의 가족들이凶具를 들고 기다릴 정도”였다고 한다.³¹⁾ 신문을 통해서 ①奏文 건에 대해서는 영의정 이경석에게 혐의가 돌아갔고, ③弔祭 건에 대해서는 조경이 지목당했다. ②舊臣 기용 건은 국왕

28) 『연려실기술』 권30, 『효종조고사본말』, 『淸使查問』; 『효종실록』 권3, 1년 3월 7일(경신).

29) 『인조실록』 권45, 22년 7월 27일(임자).

30) 『효종실록』 권3, 1년 3월 8일(신유).

31) 『백헌선생집』 부록 권2, 『年譜(中)』, “是日 禍在呼吸 家人已以凶具待館門外 滿庭諸臣 咸惴惴無人色”; 『燃藜室記述』 권30, 『孝宗朝故事本末』, 『淸使查問』, “是日舉朝邊邊以爲 罔測之禍在於呼吸 滿廷諸臣 咸惴惴無人色 家人治凶具待之館門外”

효종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查問使들의 신문과 책임자 추궁은 이미 뇌물 공여 등 막후 교섭을 통해 줄거리가 잡혀 있는 것이었다. 사문의 목적이 친청과 숙청과 척화론자 기용에 대한 견제였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통해 ①주문 건은 이만과 노협을 백마산성에 안치하는 것으로, ②구신 기용 건은 김상헌·김집 등을 효종이 처분하는 것으로, ③조제 건은 조경이 처벌받기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었다.³²⁾ ③조제 건의 경우 查問使의 신문 당일, 해당 표문의 작성자나 文衡인 대제학 등을 제쳐두고 굳이 당시의 예조판서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①주문 건은 국정의 주관자인 영의정 이경석에게 많은 혐의가 돌아가게 되었다.³³⁾

3월 9일 칙사들은 효종에게 직접 이경석과 조경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하라고 압박했다. “마땅히 死罪로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에 효종은 어쩔 수 없이 먼 변방에 安置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³⁴⁾ 이후 왜정 주문 건의 관련자인 이만과 노협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청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뒷수습의 의미를 가진 조치이기도 하였다. 왜정 주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의 책임 추궁이 있을 수 있고,³⁵⁾ 주문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의정 이경석이 수상으로서 책임을 떠안다시피 한 상황에서 무언가 내부적인 단속·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옥되어 신문을 받은 이만과 노협은 查問 과정에서 大臣에게 책임을 전가한 죄를 물어 정배토록 하였는데, 특히 노협은 신문 과정에서 세 차례나 형신을 받았다.³⁶⁾

칙사 일행이 사문을 마치고 돌아간 후 그것에 대한 淸帝의 처분이 전해진 것은 1649년 8월이었다. 원접사가 보낸 칙서 등본에는 “巴哈納, 祈充格을 보내어 查問하였는데 이만·노협을 신문한 결과 조선과 일본은 우호를 유지하

32) 『효종실록』 권3, 1년 3월 7일(경신).

33) 『효종실록』 권3, 1년 3월 8일(신유).

34) 『효종실록』 권3, 1년 3월 9일(임술).

35) 『효종실록』 권3, 1년 3월 25일(무인). “領中樞府事金堉以爲 … 其意未必推諉於廟堂也. 但以奏文終致生事 至於大臣被罪 而李曼所報 載於奏文中 若論罪太輕 則恐有妨於彼之見聞 且有後弊”

36) 『효종실록』 권3, 1년 3월 25일(무인).

고 있으므로 원한이나 전쟁 등의 일이 모두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군비를 확충하려는 의도는 원래부터 일본과 관계됨이 없고, 오로지 朕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성지를 수축하고 병마를 소집하고 기계를 정돈하는 것은 기망하는 처사이다”라는 엄중히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³⁷⁾ 그리고 함께 전해진 섭정왕 도르곤의 칙서 역시 “왜정에 우려할 단서가 없는데도 그대 나라가 번번이 이를 주문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신료들 중에 간사한 무리가 나라의 일을 괴란시키려고 계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여 효종 즉위 이후 친청과 숙청이라는 정국 변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하였다.³⁸⁾

엄중히 질책하는 칙서를 접수한 조선 조정은 인평대군 이요를 진주사로 파견하여 변무하는 주문을 올렸는데, “일본과 통신한 지 오래이지만 왜정이 헤아릴 수 없고, 근래 왜인들이 계속하여 공갈하고 요구하는 것이 전과 다르고 의심스럽다. 일찍이 임진왜란을 당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방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믿을 것이라고는 없다. 먼저 보전하고 지키는 계책이 있어야 대국이 구제해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므로 선왕대부터 이러한 걱정을 대국에 아뢰었다. 사문할 때는 이만·노협 등 邊臣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탓에 大臣이 죄를 입었으므로, 그들을 처벌하였다. 조선의 사정이 명백하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니 애통하다”는 내용으로,³⁹⁾ 사실상 備倭論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청의 실권자로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친청파를 부식해왔던 섭정왕 도르곤이 사망함으로써 효종대 초반 陳請築城備倭奏가 촉발한 청의 내정간섭이 일단락되었고, 백마산성에 안치되었던 이경석과 조정에 대한 석방 조치가 이루어졌다.⁴⁰⁾

병자호란 직후 인조에 의해 전개된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한 備倭論은 청의 왜정탐지 욕구와 부합하면서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군사

37) 『동문회고』 원편 권78, 「왜정」, 「飭虛張倭情勅」; 『효종실록』 권5, 1년 8월 27일(무신).

38) 『효종실록』 권5, 1년 9월 9일(경신).

39) 『효종실록』 권5, 1년 11월 2일(임자). 주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0) 『효종실록』 권5, 1년 12월 28일(병자).

적 대응책과 함께 대일정책의 두 축이 되었다. 그러나 효종 즉위 직후 비왜론의 전개는 청의 사문이라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일·대청외교 전략으로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비왜론이 내포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청의 반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의도적으로 수식·과장된 왜정 보고에 청이 의구심을 가지고 또 힐책할 수 있다는 염려는 1638년 島原·天草의 亂에 관하여 移咨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⁴¹⁾ 이는 대청 왜정 보고 전략, 즉 대청비왜론이, 조·청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의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 효종 즉위 이후 친청세력의 실각과 반청 기류의 확산에 대한 섭정왕 도르곤의 견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병자호란 이후 진행된 入關 등 청의 판도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일경제계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입관 이후 寧波를 비롯한 동남 연해 지역을 장악하고 일본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자, 청은 일본을 자신들의 판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낼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고,⁴²⁾ 효종대 초반 시점에는 ‘倭情 可慮’는 더 이상 긴요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메시지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다. 앞서 요약한 황제의 칙서(飭虛張倭情勅)에도 청은 천하를 평정하였음을 과시하면서 조선의 군비확충 시도에 대해서도 청에 대한 위협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다.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이라는 이유 외에도 비왜론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고정된 논리 전개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효종대 비왜론의 종말은 광해군대 對日 借重之計와 對明 備倭論, 인조대 對淸 備倭論 등의 전개와 비교해보면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외교적 논리·명분이 그 만큼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1)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5월 19일. “自今月以後 人情頗定 皆今年則必無南患 此言彼無不聞之理 今若不能審爲措語 則彼將曰 春間倭報之言 皆出本國築城停兵之計云乎 則前頭所言 皆不入耳甚爲可慮”

42) 홍성구, 앞의 논문(2009), 166~171쪽.

3. 대일외교에서 朝·淸和親論의 전개와 종말

대청외교에서는 일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의 왜정 탐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비확충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반면 대일외교상 중국 관련 정보 제공 문제에서는 ‘은폐’를 선택하게 된다.

병자호란이 진행 중이던 당시부터 원병파견론을 제기하며 중국 정세변동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 측은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를 비롯한 중국 정세를 본격적으로 탐지하기 시작하였다. 1637년 3월 일본 측은 청나라 군대의 퇴각 여부를 물어왔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우리 군사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여러 차례 적을 패퇴시키니 적이 화친을 구하며 퇴각하였다”고 답하여⁴³⁾ 전쟁의 실상을 은폐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에도 전쟁 발발 사실 자체를 왜관에 비밀로 하지는 동래부사의 狀請이 있었을 정도로⁴⁴⁾ ‘북로남왜’의 현실에서 전쟁이 조선에 가하는 타격은 심각한 것이었는데, 조정에서는 은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전쟁 사실을 통보하고 조선에 체류하는 왜사들을 대마도로 귀환시키고 對馬島에 사신 파견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때도 전란이 끝난 후에는 이른바 ‘和約’의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殲賊’,⁴⁵⁾ ‘山戎已平’⁴⁶⁾으로 전쟁결과에 대한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병자호란 후 일본 측에 대한 전쟁의 실상 은폐의 전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정묘호란 후의 조·일 관계는 조선 조정의 功利的·宥和的 대일정책과 대마도의 무기 헌상, 무역 확대 노력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병자호란 후의 전쟁결과와 조·청관계에 대한 對日 은폐는 일본 측의 외교적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43)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록』, 정축(1637년) 3월. “倭人間賊退與否 答以我兵四集累次敗之賊乞和而退云云”

44)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록』, 정묘(1627년) 1월.

45)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록』 1627년 3월. “島主送差倭 進上軍器等物 且探緩急 將欲送援 以近當 殲賊 措辭答論”

46) 『인조실록』 권15, 5년 3월 12일(기묘). “淸曰 馬島則賴我國爲衣食 必無他虞 而江戶喜事之徒 以援兵爲號 蔽海出來則何以處之 今宜放還左水使 謂以山戎已平 故回軍信地云 則彼必信之. 上曰然”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병자호란 결과를 포함한 조·청관계에 대한 대마도 측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무역량의 감소와 물품의 질적 저하 등, 대조선 통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기인하였다. 왜인들이 병자호란의 발발을 확연하게 감지하게 된 것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상거래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⁷⁾ 동래부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청관계를 은폐하면서도, 중국 정세를 언급하면서 登萊와 旅順으로 통하는 경로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었다.⁴⁸⁾

조정에서 일본에 대한 조·청관계 은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고심하게 된 것은 1637년 12월 差倭 平成連이 7조목 서계를 가지고 나오면서부터였다. 서계 중 한 항목은,

交易하는 물화가 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런가? 북쪽 오랑캐의 난리로 인해서 그런가?⁴⁹⁾

라고 하여, 왜관 지역의 상거래 침체 이유를 朝·中관계, 중국 정세와 관련하여 묻는 것이었다. 명·청교체와 관련한 동아시아 정세 변동, 좁게는 조·중관계의 변화는 이처럼 대마도 측에도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平成連이 조선에 입국한 무렵, 매·말·야학 등의 求貿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代官倭가 守門을 무단출입하고 저지하는 군관을 때리고 문을 부수고,⁵⁰⁾ 차왜가 公木의 升品을 문제삼아 역관을 붙잡고 칼을 빼어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사무역 관련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무역 감소·단절의 근원이 조·중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일본 측이 본격적인 탐지에 나선 것이었다.

47)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병자(1636년) 12월. “賊兵逼京 行商絕迹 倭人疑訝 極爲難處”

48)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정축(1637년) 3월. “又云 漢將孔惟德耿仲明 投降于隄子 隄兵將襲蝦島 登來旅順之路 不無阻絕”

49) 『인조실록』 권36, 16년 1월 22일(병술). “差倭平成連來 以七條事言之 一曰 交易物貨 不如舊 唐路不通而然耶 因北狄之難耶”

50) 『왜인구청등록』, 정축(1637년) 11월 6일;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정축 10월.

1638년 1월 대마도의 조·청관계 탐문에 대한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 조·청관계의 실상 공개 여부가 그 대상이 되었다. 병조판서 이시백은 일본 측에서 먼저 알게 될 경우 청에 패한 사실을 왜 일찍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먼저 밝히고 使臣을 파견하여 일본의 동향을 살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조는 “일본이 上國도 아닌데 굳이 사정을 알려야 하는가?”라고 하여 일본에 대해 조·청관계를 은폐한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하였다.⁵¹⁾ 문위역관으로 대마도에 파견된 홍희남과, 그에게 조·청관계를 묻는 대마도주의 대화 속에 조선 조정의 기본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대마도주 : 귀국에서 亂을 겪은 이후로 오랑캐와 통교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홍희남 : 우리나라는 文翰을 숭상하고 예의를 따르며 兵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오랑캐들이 우리나라가 생각지 않는 틈을 타서 鐵騎를 몰고 國都에까지 들어왔으므로 황급히 도성을 떠난 것이다. 그간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②대마도주 : 피차간에 사신이 자주 왕래하는가? 한 해에 보내는 물품은 얼마나 되는가?

홍희남 : 交聘하는 것일 뿐이다. 보내는 물건도 쌀이나 포목에 불과하며, 저들이 혹 요구해 오면 토산물을 가끔 보내줄 뿐이다.

③대마도주 : 부산에서 심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홍희남 : 5천 리 남짓하다.

④대마도주 : 귀국의 세자와 왕자들이 심양에 인질로 나가 있다는데, 모두 별로 없는가? 오랑캐들이 우리들을 보러 오고자 한다는데, 그러한가?

51)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6일.

홍희남 : 동궁과 왕자가 심양에 가 있는 것은 진짜 인질로 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비록 화친을 맺었으나 항상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므로 한번 성의를 보여 저들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랑캐들이 남쪽으로 온다는 말은, 나는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⑤대마도주 : 中原의 길이 끊어진 뒤로 信使를 통하지 못했는가? 중원은 천자의 나라이고 저 오랑캐들은 보잘것없다. 어찌하여 서로 버티면서 오라도록 결정이 나지 않는가?

홍희남 : 한번 요동의 길이 끊어진 다음부터는 海路를 경유하여 사신을 통하였다. 지금은 섬 안의 명나라 鎮이 불행히도 모두 함락되어 사신을 보낼 길이 없다. 그러나 피차간에 때때로 小船이 왕래한다.⁵²⁾

대화 내용 가운데 대마도주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①전쟁 후에 절교하지 않은 이유, ②세계의 양, ③부산~심양 간 거리, ④세자가 불모로 심양에 있는 사실 관계와 청의 대일통교 의사, ⑤조·명 관계 및 명·청 간 대결 양상 등에 대하여 탐문한 것이다. 이 가운데 ①②④가 조·청관계의 실상에 대한 탐문이다. 홍희남이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부정확하거나 틀린 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홍희남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는 ‘전쟁 이후 청이 다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다소의 유화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국관계는 상호 대등관계’ 정도의 像으로 설명된다.

③은 청·일 간 직접 통교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할 수 있고, ⑤가 홍미로

52) 『인조실록』 권40, 18년 5월 15일(을미). “譯官洪喜男如對馬島 賀島主生男 島主問曰 貴國經亂之後 與胡相通何也. 喜男曰 我國文翰是尙 禮義是遵 不喜用兵革 故虜人乘我不意 鐵騎長驅 傳于國都 蒼黃去邠 多少說話 想必傳聞 不欲縷陳. 島主曰 彼此使价 數相往來耶 一歲所遣復幾許耶. 答曰 互聘而已 所遣亦不過米布 彼或討索 則隨地之產 往往依副耳. 又問 自釜山至瀋陽 道里幾許. 答曰 五千里有餘矣. 又問曰 貴國世子王子 出質于瀋 皆能無恙乎 虜人將欲來見我人云 然耶. 答曰 東宮 王子之在瀋者 非眞爲質 彼雖行成 常自疑我 故一以示誠款 解彼之疑耳 且彼人南來之說 吾所未曾聞者也. 又問曰 中原路絕 則信使不通乎 中原 天子之國 彼虜 小醜也 奈何相持而久不決乎. 答曰 一自遼路之阻絕 由海路通使 今則島中漢鎮 不幸失守 他無可由之道 而彼此小船 時或往來矣”

은 점은 당시 일본이 청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빈약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을 1640년에도 “彼虜小醜”라고 표현하며 얕잡아 본 것은 문화적 우월감의 발로이기보다는 청의 전력이나 중국 판도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추정하자면 일본 측의 청에 대한 선입견은 과거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8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압록강을 건너 여진 부락을 공격했던 경험을 토대로 형성·고정된 듯하다. 즉 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청의 변모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정보 부족 현상은 한편으로 조선에 대한 원병파견 제의와 같은 비현실적 과시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조·청관계의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명·청교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조선을 통하여 탐지·탐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에서 패한 사실과 청의 책봉국이 된 사실을 일본 측에 은폐하려는 전략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1638년 7조목 건 당시 홍서봉이 상소에서 언급한 것처럼 鐵山 인근의 이정표를 입수할 정도의 일본의 정보력과, 일반화되다시피 한 역관 및 왜관 지역 潛商들의 정보 누설 등, 정황을 고려하면 병자호란과 조·청관계의 실상을 사실상 조선인들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조목 건에 대한 조정 논의에서도 영의정 이홍주가 倭書契 중 ‘唐貨’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측에서 실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신료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청관계 은폐책을 관철시켰던 인조 역시 동의하는 상황이었다.⁵³⁾ 그럼에도 인조가 조·청관계 은폐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청에 대한 ‘臣服’을 인정함으로써 초래되는 대일관계상 조선의 위상 문제였다.⁵⁴⁾ 이처럼 조·청관계 은폐는, 일본 측에서 이미 실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 조정에서 이를 다만 ‘公認하지 않음’으로써, 조·청관계를 臣服이 아닌 ‘朝·淸和親’으로 전제하고 대일외교를 전개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한 외교 명

53)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6일. “李弘胄曰 卽見洪瑞鳳上疏 則物貨不如舊 不通大唐而然耶 以此觀之 則彼必盡知我國事情 言之何妨. 上曰 彼豈不得知之”

54)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월 26일. “上曰 彼豈不得知之 然言之則不可 彼以爲兩國 臣服於淸國 則我國亦有上皇 亦當臣服言之 則何以爲之”

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청관계 은폐책, 즉 조·청화친론은 패전과 오랑캐에 대한 굴복을 자인함으로써 드러내야 하는 조선의 약세를 은폐하려는 전략이었다. 즉, 북로남왜의 여건에서 “칙사가 의주에 도착했다 하면 왜인들의 기가 살아난다”는 지적처럼⁵⁵⁾ 병자호란 이후 청(北虜)의 압박 등 조선의 잔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일본(南倭)의 외교적 공세나 무리한 요구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원두표의 우려처럼 “일본이 침략하지는 않더라도 조선의 약세가 드러나면 조약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공세를 취해올 것”⁵⁶⁾ 대비해야 하는 상황은, 당시 조정에서 감지하고 있던 위태로움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다. 조·청화친론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려졌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청화친론은 대일외교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대화 내용, 서계의 내용 등에서 조·청화친을 가상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현되었고, 외교문서상 崇禎 연호 사용⁵⁷⁾ 역시 조·청관계 은폐의 일환이었다.

1642년 1월 대마도 측은, “唐船이 일본 長崎에 와서는 ‘大明이 천하의 兵馬를 徵召하여 淸兵을 모조리 토벌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곧 막부에서 파견한 奉行差倭 平成幸이 나와서 조선에 탐문할 것이라고 알려왔다.⁵⁸⁾ 대마도 측은 막부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기 전에 자신들이 조선을 통해 중국 정세를 탐문해야 한다면서 차왜와는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⁹⁾

동래부사의 장계를 통해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조정에서는 접위관을 미리 차정해놓고 차왜 平成幸의 탐문에 답해줄 내용을 강구하였는데, 그가 탐문하려는 것이 錦州 전투의 상황일 것이라 판단하고는 청에 지원병 파견 여

55) 『왜인구청등록』, 庚辰(1640년) 12월 14일. “此輩從前往來 雖有利慾之言 不至顯發惡言 而國事到此之後 渠亦有輕我之心 每當灣上客使來此之際 則例爲一倍生氣 尤極刻責是白在果”

56) 『인조실록』 권44, 21년 3월 23일(병진). “斗杓曰 設無動兵之舉 而知我國之削弱如此 則恐不無改約條之請 是可慮也”

57) 『인조실록』 권46, 23년 3월 9일(임진).

58)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임오(1642년) 1월.

59) 『인조실록』 권43, 20년 1월 8일(무인).

부, 명·청 간 우열, 전투가 벌어진 일자 등을 물어올 경우에 대비하였다. 지원병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세자가 청에서 陪行하므로 호위할 군병을 약간 보냈다”, 전황과 일자에 대해서는 각각 “우리나라와 극히 멀고 기밀도 엄하여 자세히 듣지 못했다”, “작년 8월에 큰 전투가 있었다는데 다른 나라 일이라 자세히 모른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기로 하였다.⁶⁰⁾ 예상 질문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은 아무래도 청에 대한 원병 파견 여부였다. 사실 청의 강압을 이기지 못한 조선은 1638년부터는 수차례 군병과 물자 지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시점에는 1641년 1월에 있었던 청의 파병 요구에 따라 화기수 500명을 포함한 1,500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었다. 1641년 당시 3년 연속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던 조선으로서는 장기화된 청의 錦州 공략전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은 막심한 것이었다.⁶¹⁾ 요컨대, 조정에서 조율한 예상 답변은 그러한 조선의 피폐함·약세를 노출하지 않고, 일본 측의 청 관련 정보 요구에는 짐짓 미온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1642년 2월 파견된 차왜 平成幸은 쇼군(將軍)의 득남 소식을 알리고 通信使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平成幸의 청 관련 정보에 대한 탐문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속속 조정에 보고되었다.⁶²⁾ 차왜 平成幸과 館倭들의 탐문에 대해 조정에서는 통신사 요청과 관련한 그들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그저 공갈하려는 술책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⁶³⁾ ‘倭情으로 인해 關西 사람들까지 술렁거리는데’ 일이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이 컸다.⁶⁴⁾ 통신사 파견 요청을 접한 조정에서는 조선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통신사행에 승려를 포함시켜 그로 하여금 왜정을 정탐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

60)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1월 13일; 『비변사등록』, 인조 20년 1월 13일.

61)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219~227쪽.

62)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임오(1642년) 2월. “平成幸初頭宴設行 而密言別樣事情 別紙書架上送”

63) 『인조실록』 권43, 20년 2월 23일(계해).

64)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3월 3일(임신).

되기도 하였다.⁶⁵⁾ 요컨대 平成幸이 나온 목적은 막부의 경사를 전하고 통신사를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청 관련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조야에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조정에서 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통신사행과 관련한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642년 12월 通信使護行差倭로 파견되어 온 藤智繩은 통신사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편,⁶⁶⁾ 시중 무리한 요구를 쏟아냄으로써 “藤差(藤智繩)의 別錄을 보니 요구 조항이 40여건이나 되는” 상황이어서⁶⁷⁾ 인조가 “우리가 받은 모욕이 너무 많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정도였다.⁶⁸⁾ 이는 북로남왜의 구도하에서 청의 꺾박을 받는 잔약한 실상을 드러낼 수 없는 조선의 협소한 입지와, 청 관련 정보 탐지를 통하여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일본 측의 외교적 공세가 맞물려 초래된 조·일외교의 단면이었다.

조·청화친론의 전개에 전환점이 된 것은 1644년 청의 입관이라는 국제정세 변동이었다. 조정에서 崇禎帝의 사망, 청의 入關 소식을 접한 것은 1644년 5월에 전해진 칙서를 통해서였다.⁶⁹⁾ 조정 논의에서는 일본 측이 미처 청의 북경 공략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청의 전력이 대거 이동한 것을 탐지할 경우 의외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정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⁷⁰⁾ 인조는 신속하게 청에 왜정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조·청 간 연대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⁷¹⁾ 일본 측에 대해서는 청의 입관 사실을 역관을 통해 알리는 것이 어떠할지 의논하도록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이미 정보가 누설되어 관왜들이 알고 있을 것

65)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6월 11일(기유), 12일(경술).

66)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록』, 임오(1642년) 12월.

67) 『인조실록』 권44, 21년 2월 10일(갑술).

68) 『인조실록』 권44, 21년 2월 20일(갑신). “上又曰 今番之事 雖未必大開齟齬 而我之受侮 固已多矣 辭令之間 須十分善爲之”

69) 『인조실록』 권45, 22년 5월 7일(갑오).

70)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5월 23일. “上曰 今者淸國 空國西征 與中原爭衡之事 倭人必未及知之 而或不無念外之慮 不可置之尋常也. 領相曰 國事如此 何事不可慮 此事極可憂矣”

71)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5월 25일. 이때 발송된 倭情咨文이 ‘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이다.(『동문휘고』 원편 권78, 『왜정』)

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인조의 의중대로 역관 홍희남을 통해 먼저 통보하여 트집 잡힐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계청하였다.⁷²⁾ 이렇게 해서 홍희남이 歲遣 第1船 正官 平成倫에게 청의 입관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다음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平成倫이 말하기를,

“길에서 들은 말은 과연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청나라가 천하를 얻은 것이 조선에는利害관계가 없는가?”

라고 하니, 홍희남이 말하기를,

“청나라는 우리나라와 한 집안과 같은데, 무슨 해될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平成倫이 말하기를,

“중원은 비록 망했지만, 귀국이 일본과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이것이 곧 만세토록 편안할 수 있는 복이다…”

라고 하였다.⁷³⁾

홍희남의 답변은 그간 조·청관계 은폐, 즉 조·청화친론이 조선의 약세를 은폐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면, 청이 중원을 장악한 이상 조·청화친은 조선에 든든한 배후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일외교상 청의 존재를 활용하려 했던 인조의 의중이 반영된 답변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조·청관계가 여전히 사대·책봉이 아닌 ‘화친’으로 가공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청이 중원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조·청관계의 실상 역시 계속 은폐될 수는 없었다.

조·청화친론 종말의 단초는 일본 측에 보내는 書契의 年紀였다.⁷⁴⁾ 1644

72)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5월 26일.

73) 『인조실록』 권45, 22년 6월 22일(무인). “成倫曰 途聽之言 果未可信也 淸國之得天下 於朝鮮無所利害耶. 喜男曰 淸國與我國有同一家 有何所害之事乎. 成倫曰 中原雖亡 貴國與日本無違 則是乃萬世安寧之福也”

74) 조선전기부터 대일외교문서에 기재하는 年紀는 明의 年號를 사용하였는데, 명·청교체 이후인 1645년부터는 별도의 연호를 쓰지 않고 干支만을 사용하였다. 書契의 경우 1645년 1월부터 간지만 기재하였다.(이훈,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통교재개이후 書契式의 정착을 중심으로』, 『고문

년 5월 이후 더 이상 ‘崇禎’ 연호를 쓸 수 없게 되자, 조선 조정은 서계에 干支만 기재했고, 청의 ‘順治’ 연호를 쓰는 시점을 인조의 지시에 따라 세자의 귀국 이후로 잡고 있었다.⁷⁵⁾ 그런데 年紀를 간지기로 기재한 회답서계를 차에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갔고, 그 서계를 처음 접한 館倭는 오히려 “왜 弘光 연호를 쓰지 않느냐”고 하여 조선 측에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⁷⁶⁾ 이는 그간 조정에서 조·청관계의 실상을 ‘公認’만 하지 않은 것처럼, 일본 측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에 대해서 묵인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을 외교적으로 활용해왔음을 방증한다.

일본 측의 다소 의외의 반응에 조정에서는 일단은 계속 연월만 기재하여 보내다가 청의 증원 장악을 일본이 확실히 인지하게 된 이후 청 연호를 쓰기로 하고, 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증원에서 正朔을 반포하지 않아서 연호를 쓰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順治’ 연호 사용을 보류했다.⁷⁷⁾ 연호 사용 문제를 통해서 조선 조정에서도 조·청관계가 사대책봉관계임을 공개하려는 의사를 지니고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청관계 은폐를 지속시킨 것이다.

1644년 6월 也春(璵春) 부근에 일본 상선 3척이 표류하였는데, 胡인들이 배에 타고 있던 일본인 60여명을 유인하여 죽이고 15명을 사로잡아 瀋陽으로 압송하는 일이 일어났다.⁷⁸⁾ 이후 일본인들은 1645년 말, 조선의 세자를 책봉하기 위해 파견된 청 사신 祈充格과 함께 조선으로 보내졌고, 동래와 대마도를 경유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⁷⁹⁾ 청의 입관 이후에도 일단 유보되었

서연구』 4, 1993, 72~73쪽) 한편, 通信使가 幕府 將軍에게 전하는 朝鮮國王 명의의 國書는 명·청 교제 이후 최초의 통신사인 1655년 을미통신사 때부터 간지만으로 年紀를 표기하였다.(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國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1, 1993, 15쪽)

75) 『인조실록』 권46, 23년 3월 9일(임진). 이 기사에는 정축화약 이후에도 서계에 崇禎 연호를 쓴 이유를 “日本書契則丁丑之後 猶書崇禎年號 蓋諱出城之壘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76) 『인조실록』 권46, 23년 3월 9일(임진). “今聞東萊府私報本司之書 則館倭初見書契無號 乃言 何不書弘光南京年號耶. 譯官答曰 中原未頒正朔 故不得書年號云”

77) 『인조실록』 권46, 23년 3월 9일(임진). 1645년 6월 差倭 橘成殷이 서계에 연호를 쓰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러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었다.([인조실록』 권46, 23년 6월 5일(병진)) 그리고 이후에도 대일외교문서상 年紀 표기에 청의 연호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78) 『인조실록』 권45, 22년 7월 9일(갑오).

79) 홍성구, 앞의 논문(2009), 167쪽.

던 조·청화친론의 폐기는, 표류 왜인의 송환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결말을 보게 된다.

표류왜인들이 일본으로 송환된 이후 1646년 11월 ~1647 5월 기간 동안 일본 측은 수차례에 걸쳐 차왜를 파견하여 명·청교체와 관련한 정보, 조·청관계의 실상 등을 탐지하였다. 1646년 11월 표류왜인 송환에 대한 回謝差倭 橘成稅와 藤智繩이 조선에 입국하였다.⁸⁰⁾ 이들은 謝使로서 파견된 것이었지만 가지고 온 서계나 傳言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서계에는 ‘韃靼’이라는 용어가 清朝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있었다. 청에 대한 일본의 반감과 멸시가 담긴 용어였다. 또 차왜들은, 청이 표류왜인을 조선을 통해서 보낸 사실에 대해 幕府 내부에서는 “조선이 韃靼과 하나가 되었다”고 격분하면서 조선에 길을 빌어 명에 구원병을 보내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청의 연호가 順治임을 거론하면서 조선에서 사용하는 연호를 캐물으며 조·청관계를 탐지하기도 하였다.⁸¹⁾ 1645~1646년에 걸쳐 진행된 표류왜인 송환은 일본인이 청의 입관 직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건이다.⁸²⁾ 일본 막부 측은 조선에서 걸러지지 않은 생생한 청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또 이에 자극받아 다시 한번 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韃靼’이라는 용어와 ‘征清假道’로 표현할 수 있는 動兵 논의는 임진왜란기부터 형성·고정되어온 여진=오랑캐의 선입견과 그간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통교를 시도했던 명을 멸망시킨 적대세력이라는(동아시아 질서의 파괴자라는) 인식, 그리고 당초 표착한 일본인들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다수 피살되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⁸³⁾

정황상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던 일본 측의 전언과 탐지 활동은 서울에 큰

80)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록』, 병술(1646년) 11월; 『인조실록』 권47, 24년 11월 9일(신해). 유의할 것은 이때 回謝/致謝의 대상 국가는 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이었다.

81) 『인조실록』 권47, 24년 11월 9일(신해), 12월 22일(갑오).

82) 홍성구, 앞의 논문(2009), 167쪽, 각주 25) 참조.

83) 이에 관해 홍성구, 앞의 논문(2009), 163쪽에서는 “청조가 입관하자 이러한 사태를 ‘華夷變態’로 인식하고 명을 도울 원병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고 설명한다.

소동이 일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인조는 이에 대해 당시 대마도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島主 모친 喪 致弔’의 청원을 이루려는 저의가 있다고 단정하면서도, 왜정을 신속하게 청에 移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⁸⁴⁾

1647년 2월 문위역관으로 대마도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이형남의 귀국 보고에는 “막부에서 조선과 韃靼이 연합한 것에 대해 매우 격분하여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먼저 배대 곳을 탐지해 갔다”는 좀더 구체화된 動兵 움직임에 관한 대마도주의 전언이 포함되어 있었다.⁸⁵⁾ 同年 3월에는 차왜 藤智繩이 입국하여 “에도에서는 명·청의 소식이 잇달아 들리는데, 대마도주는 조선과 우의가 두터우면서 한번의 통보도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라는 막부의 불만을 전하면서, 청이 표류왜인들을 조선을 통해 송환한 것은 조선이 청과 서로 좋게 지내는 것 때문이 아닌지, 明代와 마찬가지로 조선이 청의 藩邦인지를 물어왔다.⁸⁶⁾ 그리고 4월에는 奉行差倭 平成幸·恕首座가 입국하여 상경을 고집하면서, 조선이 청을 대하는 禮와 사용하는 연호를 캐물었다.⁸⁷⁾ 지속되는 일본의 조·청관계 탐문에 조정에서는 비로소 조·청관계의 실상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병자호란 직후 조·청관계 은폐를 지시했던 것처럼 이때 결단을 내린 것도 국왕 인조였다. 봉행차왜를 접대할 접위관을 내려보내면서 연호를 물을 경우에 대비해 인조는 “형세가 끝내 숨기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 바로 말하게 해서 곤욕을 면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⁸⁸⁾ 비변사에서는 갑작스런 공개로 사단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 84) 『인조실록』 권47, 24년 11월 27일(기사); 『동문회고』 원편 권78, 「왜정」, ‘報島倭書契誤稱韃靼字咨’.
 85) 『인조실록』 권48, 25년 2월 6일(정축). “譯官李亨男自對馬島還奏曰 島主言 關白執政輩 以朝鮮與韃靼合 莫不駭憤 將欲興師而來 先使人規視泊船處而去”
 86) 『인조실록』 권48, 25년 3월 25일(병인). “藤智繩言 大君致書於島主以爲 此處則南北京消息連續相聞 而島主素與朝鮮相厚 一不通報 是何故耶. 島主欲趁未入往之前 詳細傳報云. 又曰 以漂民之事言之 則清國送于朝鮮 朝鮮轉送于我國 朝鮮與清國 果非相好而然耶. 大明時 朝鮮爲藩邦 卽今貴國之於清國 亦如是耶”
 87) 『인조실록』 권48, 25년 4월 5일(병자). 5월 3일(계묘).
 88) 『인조실록』 권48 25년 4월 3일(갑술). “答曰 勢難終諱 使之直言 以免困辱可也”

이번에 왜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꼭 숨기려 하는 비국의 계책은 어떤 소견에서 인가. 모든 일은 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대응해야 하는데, 한결같이 미봉책을 쓴다면 한갓 모욕을 당하는 소지만 될 뿐이니 그 기미가 어찌 중하지 않은가. 왜인들은 교활하여 우리나라가 두려워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점차 모욕을 가해오는 것인데, 시종 굳게 숨기면서 그들의 모욕을 받는 것이 옳은가, 실상을 분명히 말하여 간사한 계책을 깨뜨리는 것이 옳은가.⁸⁹⁾

여기서 미봉책이란 조·청관계 은폐책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조가 비판한 것은 미봉책 자체가 아니라 ‘한결같이 미봉책을 쓰는 것(一向彌縫)’이었다. 당초 조·청관계 은폐라는 미봉책을 구상하고 전개한 것은 정작 인조였다. 인조가 조·청화친론 폐기로 선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청의 입관 직후 ‘세자 귀국 후에는 順治 연호를 쓸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서 포착된다. 대다수 조정 신료들과는 달리 대일정책상 청을 조선의 배후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던 인조가 청의 중원 장악이 확인해진 이후 더 이상 조·청관계를 은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인조의 지시에 따라 조선이 청 연호를 사용한다는 조·청관계의 실상 공개는 경상감사 허적이 차왜 平成幸·愆首座를 접견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⁹⁰⁾ 이로써 대일외교상 전략의 일환이었던 조·청화친론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 조·청화친론은 출발부터 한계가 명확한 외교 전략이었다. 첫째, 병자호란 패전이나 사대책봉관계 등 조·청관계의 실상을 은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647년 6월 경상감사 허적이 청 연호 사용을 공개했을 때 돌아온 답은 “대마도에서는 조선이 청 연호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안 지 이미 오래이다”는 것이었다.⁹¹⁾ 또 조정에서도

89) 『인조실록』 권48 25년 4월 5일(병자). “上曰 今番倭人之所欲聞者 必欲諱之 備局之啓 何所見耶. 凡事審察形勢而應之 一向彌縫 則徒爲見侮之地 其機豈不重哉. 時倭差來問我國待清國之禮及所用年號 倭情狡詐 見我國畏縮 故漸加侵侮 終始牢諱 而受其侵辱可乎. 明言實狀 以破奸謀可乎”

90) 『비변사등록』, 인조 25년 7월 1일; 『인조실록』 권48, 25년 9월 5일(임인). “積至東萊 與之欵等設宴 見差倭 具告以清國形勢及我國方用順治年號等事”

일본 측이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청화친론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병자호란 직후 조·청관계의 공개와 은폐 모두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이었음을 방증한다. 조·청화친론의 태생적 한계를 자인하였던 것이다. 둘째, 일본 측이 조·청화친론을 묵인하고 동병론의 제기나 청 관련 정보의 탐문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대일관계가 수세적 국면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637년 7조목 건의 제기에서부터 1645년 대마도주 모친상 致弔 청원 등은 일본 측이 조·청화친론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외교적 공세를 가해왔던 사례들이다. 셋째, 결국 청 관도의 변화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결론을 보았지만, 조·청화친론(조·청관계 은폐책)은 사실상 퇴로가 없는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조·청관계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즉 패전과 청의 압박을 받는 실상을 공개하였다면, 그 경우 역시 조선의 약세를 틈타 일본이 외교적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당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의 중원 장악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조·청친화론의 폐기 등 방향 전환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조치였을 것이다.

다만, 인조의 지적처럼 대일외교상 禮分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일본 측의 적극적인 탐문 활동에 대응하면서 청 관련 정보를 적절히 걸러내고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원의 판도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여 조·청화친론을 폐기함으로써 일본 측이 외교적 공세를 취할 때 빌미가 되는 한 가지 요인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출구 전략에서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병자호란 이후 대외 전략 모색 과정에서 창출된 비왜론과 조·

91) 『인조실록』 권48, 25년 9월 5일(임인). “成幸等曰 … 且朝鮮之於清國 合用其年號 島中知之已久 而未嘗不多般措辭於大君 以爲朝鮮地也”

청화친론이, 청의 입관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인조에서 효종으로 정권 교체라는 대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그 효용성이 소멸되고 용도 폐기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비왜론은 대청 왜정 보고를 통해 전개되었는데, 조선 정부는 ‘倭情 可慮 · 可疑’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조·청 간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당시 청은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선에 청·일 간 통교 주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조선 정부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또 청·일 간 연계를 차단하면서 대일정책상 독자성을 유지해나갔다.

조·청화친론은 병자호란에서 패전하여 청에 稱臣하게 된 사실을 일본 측에 은폐하는 전략이었다. 대청외교에서 일본의 정세·동향을 적극적으로 제 공한 것과는 정반대로 조·청관계나 중국 정세를 은폐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비왜론과 달리 그 한계가 매우 분명해 보이는 조·청화친론은 여진족에 臣服한 사실을 공인하지 않음으로써 대일외교에서 조선의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고 패전국으로서의 약세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전통적으로 각각 ‘수어’와 ‘접대’의 대상으로 상정해왔던 북로남왜에 대한 대응 전략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면, 1644년 청의 입관으로 일단락된 명·청교체는 수정된 전략의 효용성이 다시 문제시되고 한계를 노정하면서 효종 초반 대외전략상 위기 국면으로 이어졌다.

효종 초반, 인조대 후반의 것을 관성에 떠밀리듯 계승한 비왜론의 전개는 청의 査問이라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일·대청외교 전략으로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비왜론의 내포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청의 반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왜론은, 조·청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였던 것이다. 효종 즉위 직후 청의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 친청 세력의 실각과 반청 기류의 확산에 대한 청의 견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644년 청의 入關으로 인한 판도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일경계심 완화도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청이 중원의 판도를 장악하고 일본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확보한 시점에서 ‘倭情

可慮'는 더이상 긴요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메시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이라는 이유 외에도 비왜론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고정된 논리 전개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일외교에 활용된 전략이었던 조·청화친론의 종말은 좀더 빨리 다가왔다. 이 전략은,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고 주도한 인조마저 미봉책이라 지적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위태롭기만 했다. 다만, 그 한계를 인지하고 용도 폐기되는 과정은, 청의 입관 후 조선에 대한 청의 견제가 완화되고 순치되어가는 상황을 조선 조정에서 자인하게 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비교적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자호란 이후 대외 전략 모색 과정에서 창출되었던 그러한 외교적 논리들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 역할과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얼핏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그 생명력이 짧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대외적 여건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5년, 10년 이상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전략상 돌파구가 되었던 그러한 외교적 논리·명분을 대체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의 입관, 효종의 즉위로 이어지는 추이에서 그러한 전략적 모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관해서는 추후의 논고를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인조~효종)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倭人求請謄錄』

『同文彙考』

『燃藜室記述』

『白軒先生集』(李景奭, 1595~1671)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김세봉, 『孝宗初 金自點 獄事에 대한 一研究』, 『사학지』 34, 2001.

김태훈, 『병자호란 이후 倭情咨文의 전략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國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1, 1993.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이 훈,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 -통교재개이후 書契式의 정착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 1993.

홍성구, 『淸朝의 日本認識』, 『역사교육논집』 42, 2009.

홍성구, 『淸 入關 前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再編과 日本』, 『명청사연구』 33, 2010.

A Study of the Crisis in External Strategy from the late Injo to the Early Stage of Hyojong

Kim Taehoon*

This is a study that new external strategy was sought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and its usefulness in the wake of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diplomatic logic and justification created in the process, such as 備倭論 and 朝·清和親論, the entry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nthronement of Hyojong. And this thesis examines the process of losing and undergoing the process of abol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risis in external strategy between the late Injo and early Hyojong.

‘Diplomatic justification that prepare for the provocation of Japan’(備倭論) was embodied in reporting Japan's movements to the Qing Dynasty.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form a strategic consensus between Joseon and Qing by delivering the message of threatening Japan's move and maintain independence in policy toward Japan while blocking the link between China and Japan. However, the limitations were revealed as the Qing dynasty took over Beijing, and it was intertwin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wariness toward Japan was eased, and the Qing check against the use of anti-Qing personnel after Hyojong's accession.

‘Hiding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朝·清和親論) was a strategy to conceal from the Japanese side the fact that it had surrendered to the Qing Dynasty after being defeated in the Manchu War of 1636. It was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a very clear and incomplete countermeasure, which was practically discarded as the checks on Joseon were eased after Establishment of “Mainland” Qing.

The abandonment of the use of this diplomatic strategy, which had achieved certain results in the period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led to a crisis in foreign strategy as no new countermeasures emerged after that.

Key words: The Manchu War of 1636(丙子胡亂), Diplomatic justification that prepare for the provocation of Japan(備倭論), Hiding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Qing(朝·淸和親論), Establishment of “Mainland” Qing, Change in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